

북한의 위협수준

방위비 정책결정

“뚜렷한 함수관계 없다”

현인택씨 연구서 ‘한국의 방위비’ 출간

우리나라 국방비 문제를 민간 학자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첫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60년대 이후 방위비 정책결정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외 정치상황 및 경제성장·복지비용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비교하고 있는 <한국의 방위비>(현인택·사회과학원 연구원)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방위비 책정에서 ‘북한의 위협’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흥미롭다.

현씨는 이 책에서 북한의 방위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방위비를 얼마 늘렸으므로 우리도 얼마 늘린다”는 상호작용-반작용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방위비 추계가 나울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한의 방위비가 북

한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지적이다. 90년 기준으로 볼 때 남한의 방위비는 북한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이 국민총생산(GNP)의 약 5%를 방위비로 쓰고 북한이 약 25%를 쓰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의 방

고 △‘군사적 균형’이 아니라 ‘전쟁억지력’을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북한 위협요인설’은 의문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씨는 “북한의 위협요소와 방위비 수준에서 뚜렷한 함수관계를 찾아내기 힘들며, ‘위협요소’는 방위비 수준을 결정짓는 투입요인으로 작용할 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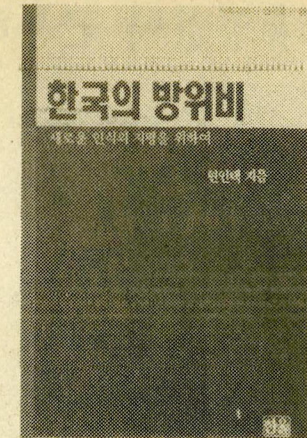
무기구입 등 대미관계·정책 우선순위 주요인 합리적인 방위비 책정엔 ‘사회민주화’가 열쇠

위비 총액 정도를 한국은 전투력 증강사업(무기구입·연구개발)에 쓰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군부가 주로 주장하는 남북한의 전체적 방위력(<89년 국방백서>는 88년 기준으로 남한이 북한 전력의 65%에 불과하다고 분석)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무기체제의 상이성 등으로 전력비교의 객관성이 어렵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20여년간의 한국 방위비 책정요인을 분석해볼 때 △무기구입 및 방위비 분담요구 등 미국과의 관계 △정권의 정책목표 우선순위 등이 보다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발전정책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 80년대 초·



중반 한때 방위비가 감소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씨는 정책결정의 주체들(예컨대 경제기획원과 국방부) 사이의 의견교환·상호견제 등을 통한 ‘관료정치’의 활성화가 방위비 책정, 특히 감축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확히하고 △행정부내의 ‘관료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방위비 책정의 중요한 요소로 현씨가 꼽고 있는 것은 ‘민주화의 진전’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된 사회 제세력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요구가 더욱 강해져 견제와 균형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한국의 방위비 문제에 대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한국의 민주화’란 요소로 수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공순 기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한다.

현씨는 앞으로 적정 방위비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맞추어 한반도에서의 ‘역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 ‘안보낭비’의 우려를 줄이고 △국방예산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며 △감군을 고려해야 하며 △한-미간 방위비용 분담원칙을 명